

해방 60년 한반도의 과거, 현재, 미래

- 출처 :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 저자 :
- 발행일 : 2005년 8월 2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광복 60주년의 한국 민주주의와 민족 문제의 현황

정 해 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1. 글을 시작하며

2005년 올해로서 우리는 광복 60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광복 60주년의 이 기간은 단지 60년이라는 물리적 세월이 흘렀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기간 동안 한국사회는 과거 역사의 그 어느 시기보다도 비교하기 어려운 엄청난 변화를 보였기 때문이다.

우선 이 기간 동안 한국사회는 '압축적 근대화'라고도 할 수 있는 심대한 변화를 겪었다. 즉 분단과 전쟁의 시련 속에서 근대 국가의 건설이 이루어졌고, 이에 뒤이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졌던 동시에 약간의 시차를 두면서 민주화의 과정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한국사회는 60년 전의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진 사회가 되었다. 60년 전의 한국사회가 근대에 진입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근대화 이전의 사회라 한다면, 지금의 한국사회는 이미 압축적 근대화의 성과 위에서 거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정도로 발전한 사회가 된 것이다.

그러나 '압축적 근대화'라 할 수 있는 이 같은 변화에 더하여, 우리는 근래에 들어 한국사회 및 한반도를 둘러싸고 새로운 변화의 계기들이 야기되었거나 야기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체제로의 이행, 즉 탈독재의 민주화 이행, 냉전체제로부터 탈냉전으로의 변화, 그리고 이와 더불어 야기되고 있는 세계화 및 정보화 등의 계기들이 그것이다. 이 같은 새로운 변화의 계기들은 압축적 근대화의

변화를 거친 한국사회를 다시금 변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변화의 계기들, 특히 탈냉전과 세계화의 영향은 북한사회에 대해서까지 그 변화를 재촉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광복 60주년의 한국사회는 압축적 근대화에 의해, 그리고 이에 더하여 또 다른 변화의 계기들에 의해 변화되고 있으며, 광복 60주년의 한반도의 현실 역시 근래에 등장한 이 같은 변화의 계기들에 의해 그 변화가 모색 중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광복 60주년을 맞아 한국사회와 한반도에서 일어났고 또한 일어나고 있는 이 같은 변화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와 민족 문제의 현황을 검토해보기 위한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왔고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그것은 어떠한 방향에서 그 발전이 모색되어야 할 것인가? 광복 이후 한국의 민족문제는 어떤 형태로 구조화되었고 그것은 현재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향후 그것은 어떠한 방향에서 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인가?

2.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와 현황

(1)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

광복 60년의 기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물론 한국 민주주의 발전 정도가 아직 서구의 그것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서구에서 거의 2~3백년간에 걸쳐 이루었던 민주주의 발전의 성과를 60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거의 따라잡았다. 더구나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강한 국가'¹⁾, 즉 허약한 사회에 비해 과대성장된 국가의 존재라는 불리한 조건 위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발전의 성과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강한 국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급속한 민주주의의 발전이 이루어졌던 배경과 원인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우선 우리는 한국 근대 역사에서 강한 국가의 등장이 상당히 일찍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에서 근대적 모습을 갖춘 강한 국가가 등장했던 것은 일제 때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스스로가 명치유신을 통해 강한 국가의 전통을 가졌던 일제가 그 식민 지배를 위해 한국에 강력한 식민지 국가체제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일전쟁 및 대동아전쟁의 일제 말에 전쟁을 위해 일본이 한국에 부과했던 국가동원체제는 전쟁이라는 특정한 목표를 위해 사회를 통제하고 사회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자 했던 국가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었다. 물론 일제 패망으로 일제의 식민지국가는 붕괴했다. 그러나 그것이 이후 한국에서 강한 국가의 등장에 미친

1) 여기에서 '강한 국가'란 사회에 대한 것으로, 그것은 국가가 사회를 억압할 수 있는 강한 강제력을 보유했다는 점과 사회의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보다 자율적일 수 있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영향은 매우 컸다.

한국에서 강한 국가가 등장할 수 있는 또 한번의 계기는 해방 후 국가 건설의 시기였다. 세계적 냉전의 강화 속에서 그 최전선에 위치해 있던 한국에서 남북의 분단국가 건설은 좌우 갈등과 남북 분단 그리고 전쟁의 참혹한 경험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다. 남한의 경우 이런 과정을 거쳐 등장한 국가는 좌파세력 및 북한과의 대결 속에서 구축된 강력한 친미 반공국가였다. 다른 한편, 해방 후 이 같은 강한 국가가 등장했던 과정은 그러한 국가 등장에 반대하고 저항했던 사회세력 또는 집단이 철저히 분쇄되었던 과정이기도 했다. 따라서 해방 후 한국 민주주의가 출발했던 것은 '강한 국가 대 약한 사회'라는 바로 이 같은 불균형적인 조건에서였다.

해방 후 장기간에 걸쳐 독재통치가 이루어졌던 상황에 대한 이해는 바로 이 같은 강한 국가 대 약한 사회라는 조건에 대한 이해 없이 가능하지 않다. 한국에서 장기간에 걸친 독재통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가권력을 장악한 특정 세력이 그 국가권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독재통치를 강요하게 되었을 때 이에 반대하고 저항할 수 있는 사회적 힘이 미약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반공세력이 국가권력을 장악한 가운데 이승만의 반공독재가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군부세력이 쿠데타를 통해 국가권력을 장악한 가운데 박정희의 개발독재와 전두환의 5공 독재가 이루어졌을 때, 당시로서는 그것을 지지할 수 있었던 사회적 힘은 미약했던 것이다.

물론 독재통치의 권위주의 하에서 민주화운동은 빠른 속도로 발전했고, 때로 그것은 독재정권을 붕괴시키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것이 탈독재의 민주화 이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힘의 불균형 때문이었다. 그러나 독재통치 하에서 점차 그 힘을 강화시켜나갔던 민주화운동과 이를 중심으로 증대되었던 민주화의 압력은 마침내 1987년의 민주대항쟁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탈독재의 민주화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가 국가와 사회관계에 대해 의미했던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그 동안의 조건, 즉 강한 국가 대 약한 사회라는 불균형적인 조건이 이제는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강한 국가 대 약한 사회라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불리했던 구조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의 급속한 성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물론 민주화운동의 성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가장 일차적인 원인은 민주화운동의 역할 그 자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화운동은 정치적 기회가 열릴 때마다 민주화의 대의를 확산시켰고, 그것은 사회의 공감대를 증대시킴으로써 민주화운동 자체를 성장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던 사회적 배경은 없었던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적어도 1987년까지의 한국 민주화운동이 가졌던 다음과 같은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이 기간 중 한국 민주화운동이 주로 학생과 지식인 중심의 세력을 통해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민주화운동이 그 영

향을 미칠 수 있었던 대중은 농촌의 대중이 아니라 주로 도시의 대중, 특히 '계몽된'²⁾ 중산층이었다는 점이다. 즉, 1987년까지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주로 학생과 지식인 그리고 이들을 지지했던 도시 중산층이 그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물론 1970년대에 들어 노동운동 등 새롭게 등장하게 된 사회운동이 민주화운동에 합류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화운동의 중심세력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한국 민주화운동은 왜 이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 상황과 관련이 있었다. 하나는 한국 민주주의의 출발 이전에 분단과 전쟁 과정을 통해서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 계급세력이 무력화되었던 역사적 상황이다. 그 결과 한국 민주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급세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따라서 학생과 지식인 등을 중심으로 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집단이 한국 민주화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산업화 및 도시화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우선 산업화는 그 성공적 추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역적, 계층적 격차를 만들어냈고, 그것은 이에 대한 비판을 통해 민주화운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한편 이 기간 동안 급속히 확대되었던 도시화는 교육과 언론 등을 통해 민주주의 의식의 발전과 소통이 가능했던 도시적 공간, 그중에서도 특히 대학과 교회 등을 중심으로 민주화의 저항블록이 형성될 수 있었던 공간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산업화와 도시화가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전후의 한국사회가 강한 국가에 대해 허약한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후 급속하게 이루어졌던 산업화와 도시화의 사회변동이 민주화운동의 사회적 배경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민주화운동이 갖는 도시적 특징은 해방정국의 과정에서 좌파세력의 혁명운동이 주로 농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비교해볼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농촌 중심의 좌파세력의 혁명운동에 비해, 전후의 민주화운동은 도시화라는 새로운 사회변동에 바탕하여 학생과 지식인의 새로운 집단에 의해 주도되었던 운동이었던 것이다. 반면 분단과 전쟁 과정에서 재보수화되었던 농촌은 독재통치의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 되었다.

강한 국가에 대 허약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면, 우리는 이를 전제로 한국 민주화운동의 구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발전하고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첫 과정은 해방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제도와 규범이 위로부터 부과된 가운데 이승만의 반공독재에 대해 민주화의 요구가 형성되었던 1950년대의 '조숙한 민주주의'의 과정이다. 두 번째 과정은 박정희의 개발독재에 대항하여 민주화운동이 보다 조직적으로 결집, 지속적인 민주

2) 여기에서 '계몽된' 중산층의 의미는 경제발전에 대한 일방적인 강조와 주장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에 대한 의식을 가졌고 이를 지지했던 중산층을 말한다.

화운동이 전개되고 발전되어갔던 1960~70년대의 민주화운동이다. 세 번째 과정은 민주화운동에 대중이 본격 동참함으로써 운동이 항쟁으로 전환, 마침내는 대규모 대중 참여의 민주화 항쟁을 통해 탈독재의 민주화 이행이 가능하게 되었던 과정이다.

우선 해방 후 한국의 제반 민주주의적 제도와 규범은 반공주의와 더불어 미군정에 의해 외부로부터 도입되어 위로부터 부과되었다.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통해, 그리고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던 서구 민주화의 경험에 비추어, 본격적인 산업화 이전에 위로부터 부과되었던 이 같은 '조속한 민주주의'가 한국정치의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되기는 어려웠다. 반공주의에 바탕하여 이승만의 반공독재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와 같이 위로부터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의 시기에 4·19혁명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조속한 민주주의'가 매우 빠른 시간 내에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1950년대 확산되었던 보통교육의 영향, 1950년대 후반에 걸쳐 민주화의 분위기를 확산시켜주었던 언론의 역할, 그리고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직접 행동에 나섰던 학생들의 집단행동과 이를 지지했던 도시 대중의 분위기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19혁명을 통해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던 이 같은 '조속한 민주주의'의 힘만으로 5·16쿠데타를 통해 등장한 박정희정권을 저지하기는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1960년대에 걸쳐 박정희정권의 경제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을 때, 박정희정권에 대한 지지는 더욱 증대, 국가 주도 산업화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합의로서 '발전주의 연합'이 구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후 박정희정권이 3선개헌과 유신체제의 수립 등 장기집권의 길에 나서게 되었을 때 박정희 개발독재에 대한 민주화운동의 저항은 점차 본격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1970년대에 들어 박정희식 경제발전의 부정적인 결과가 노정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비판 속에서 등장한 노동운동 등 사회운동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렇게 형성된 그들은 민주화운동에 합류했다. 결국 유신체제 등장 이후의 1970년대 상황은 공개적인 독재체제로서의 유신체제와 이에 저항하며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던 민주화운동이 전면 대치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전면 대치 상태에 있었던 유신독재와 민주화운동은 1970년대 말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은 독재세력 내부의 분열로 이어졌다. 부마항쟁과 그로 인한 박정희 사망의 10·26사태가 바로 그것이었다. 1979~80년 '서울의 봄' 시기 민주화 이행의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 민주화 이행은 신군부세력의 12·12 및 5·17쿠데타로 무산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에 저항했던 광주항쟁 진압의 유혈적 비극이 발생했다. 그러나 광주항쟁의 이 같은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제 대중이 민주화 항쟁에 직접 동참하고 나서게 되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광주항쟁에 대한 신군부세력의 유혈적

인 진압은 이후 전두환의 5공 독재정권의 정당성을 크게 약화시켰다. 따라서 '서울의 봄' 시기 민주화 이행의 실패는 역설적으로 1980년대의 격렬한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고, 그것은 마침내 1987년에 들어 대규모 대중 참여의 민주대항쟁의 성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강한 국가의 존재에 힘입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던 권위주의체제의 독재 통치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대신 약한 사회의 불리한 여건 속에서 '조속한 민주주의'로 시작되었던 한국의 민주주의는 독재통치에 대항하면서 성장했던 민주화운동을 거쳐 탈독재 민주화 이행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 같은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산업화 및 도시화의 급속한 사회변동 속에서 학생 및 지식인 중심의 민주화운동세력이 도시 대중을 중심으로 그 지지를 동원, 마침내는 대규모 대중 참여의 민주화 항쟁을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2) 한국 민주주의의 현황과 그 진단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민주주의는 탈독재의 민주화 이행으로 인해 우선 그 최소한의 조건, 즉 국민의 직접적인 선택에 의해 민주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민주화가 진점됨에 따라 국가권력을 장악한 정치세력 역시 그 악압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민주화에 따라 국가의 통제와 억압이 약화되고 축소됨에 따라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그리고 시장의 역할은 보다 확대되었고 그 자율성은 보다 증대되었다. 즉 민주화 이후의 정당정치는 보다 활성화되었고, 민주화 이후의 사회운동 역시 보다 다양화되고 분화되었으며, 민주화 이후의 시장 역시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모습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발전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원인들 때문이었다. 우선 6월 민주대항쟁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양 김씨의 분열로 인한 민주화운동세력의 집권 실패는 과거 독재세력이 그 기득권을 거의 훼손당하지 않은 채 합법적 정치세력으로서 생존 가능하게 만들어주었다. 따라서 이제는 보수적 정치세력으로 변신한 그들은 민주개혁에 대한 강력한 거부 세력으로 남을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전면 등장한 지역주의는 지역주의 정당체제를 구조화시킴으로써 사회와 일정 괴리된 정치구조를 만들어 냈을 뿐만 아니라, 비지역적 정치세력의 제도정치권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으므로 이들 중심의 제도정치적 카르텔을 구축할 수 있었다.

나아가, 탈독재 민주화의 영향과, 이에 뒤이어 급속히 확산되었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은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우선 민주화 이후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중앙집중화가 더욱 심화됨으로써 서울·수도권과 지방간의 발전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그 결과 이미 박정희시대부터 등장했던 지역간 개발 격차의 문제는 이제 서울·수도권과 지방간 발전 격차라는 보다 심각한 모습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

후 한국사회에 보다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충격이다. 지난 1997년 IMF위기 이후 그 위기 극복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한국사회에 전면 확산되었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현실은 현재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과거와는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가 기득권세력의 온존과 지역주의정치로 인해, 그리고 민주화 이후 더욱 심화되었던 서울·수도권과 지방간 발전 격차 및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한 계층적 격차의 심화 등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한편으로는 발전을 이룩했던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평가를 해본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한국사회의 자유는 매우 확대되었다. 그러나 강력한 기득권세력의 온존과 지역주의정치로 인해 정치적 참여와 평등의 진전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경제적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민주화 이후의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떤 점에서는 오히려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민주화 및 세계화의 영향 속에서 시민들의 실제적인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적, 계층적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화에 따라 형식적 민주주의 또는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적 민주주의 또는 경제적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가 처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지역주의정치의 극복과 기득권 구조의 약화의 방향에서, 그리고 특히 지역적, 계층적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민주화의 방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 민주주의의 이 같은 발전과 관련하여, 우리가 유념할 것은 민주화와 세계화의 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와 이해가 폭발적으로 분출하고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타협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민주주의 진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인 절차의 개발과 더불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한국 민족문제의 전개와 현황

(1) 한국 민족문제의 전개

민족문제라 할 때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민족 또는 민족국가의 입장에서 그 자주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가고자 태도와 관련한 문

제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남북한의 분단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서 남북의 통일을 위해 그 해결이 모색되어야 하는 문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광복 60년의 기간 동안 한국의 민족문제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고 그것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해방 직후 한국의 민족문제는 세계적 냉전 속에서 남북이 분단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 그것을 저지하는 한편 통일정부 수립을 모색하는 시도로서 나타났다. 예컨대, 좌우 합작운동과 남북협상운동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작운동은 남북한 분단국가의 수립과 이에 뒤이어 발생했던 한국전쟁에 의해 그 흐름이 중단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남한에서 다시 한번 평화통일의 민족문제가 전면화되었던 것은 1950년대 말 조봉암과 진보당의 평화통일 주장과 4·19이후 혁신세력과 학생들에 의해 전개되었던 평화통일운동이 등장했을 때였다. 그러나 민주화의 막간에서 잠시 그 모습을 드러냈던 이 같은 움직임은 5·16쿠데타 이후 다시금 자취를 감추었다.

이후 민족문제는 한일회담 과정에서 잠시 그 얼굴을 드러냈지만, 반일감정에 바탕하여 한국정부의 굴욕외교를 규탄했던 그것을 제외하고 민족문제는 1960년대 내내 주요한 이슈로서 제기되지 않았다. 오히려 1·21청와대 습격사건, 프예블로호 나포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으로 인해 1960년대 후반의 한반도정세와 남북관계는 악화 일로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1969년 닉슨독트린 선언과 이에 따른 일부 주한미군의 철수, 그리고 미·중, 미·일 관계개선에 의한 데탕트 분위기의 도래 등은 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정희정권은 한편으로 남북대화를 시도,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7·4 남북공동성명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박정희정권이 1970년대 내내 보다 많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것은 자주국방이라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경제개발의 추진과정에서 박정희가 자주 사용했던 '조국근대화' 및 '민족중흥'의 민족주의적 언술과, 1970년대에 들어 박정희가 국방력 강화와 관련하여 사용했던 '자주국방' 등의 민족주의적 언술, 그리고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사일과 핵 개발 시도에 나섰던 박정희의 태도에 대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

경제발전과 자주국방의 추진 과정에서 박정희가 사용했던 민족주의적 언술은 한미일 간에 구축된 구조적 관계 속에서 한국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스스로의 힘에 의한 국방력 강화를 이룩함으로써 한국의 독자적인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국민 동원의 수단이라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것이 '박정희식 민족주의'의 한 표현이라 한다면, 그것은 부국강병을 위한 위로부터의 민족주의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박정희식 민족주의의 충성이 남한 국가에만 한정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는 대립과 극복의 대상으로서 간주함으로써, 그것은 남북 전체를 아우르는 민족주의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식 민족주의는 일제 당시의 저항적 민족주의의 연장선 상에서 남북 통일의 민족주의로 이어졌던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와

는 전혀 다른, 위로부터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라 할 수 있었다.

아무튼, 박정희정권은 7·4남북공동성명 이후 남북관계에 있어 별다른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성과가 있었다면 국제기구 및 유엔에 대한 남북한 동시 가입을 천명했던 1973년 '6·23선언'을 통해 북한체제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해주었던 '2개의 한국' 정책을 시행했다는 점 정도가 있을 뿐이다. 남북한의 이 같은 관계는 전두환 5공 정권하에서 일시 남북대화가 추진되었을지라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냉전기간 동안 한국의 민족문제는 분단 상태를 유지하는 것, 북한에 경쟁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 이상의 모습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 민족문제의 현황과 진단

그러나 1980년대 말 이후 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로 인해 국제적인 탈냉전이 이루어짐으로써 한반도 주변정세 및 남북관계의 역학구도와 그 정세는 일변했다. 즉 남한의 노태우정부는 동구권 및 소련 그리고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던 한편 남북대화를 적극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합의 및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합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붕괴 속에서 고립되지 않을 수 없었던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에도 실패함으로써 더욱 고립되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권의 붕괴 속에서 북한의 경제난 역시 악화되었다. 결국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해 야기되었던 탈냉전의 상황은 외교적인 측면에서나 경제력의 측면에서 남한에 비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열세에 처해 있음을 드러내주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의 핵개발은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북한이 미국에 대해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거나, 자신의 체제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대외 협상수단이라 할 수 있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갈등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북한체제의 생존과 관련하여 북핵문제의 처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핵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구축에 있어 획기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탈냉전의 상황은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영향을 미쳤다. 1991년 말 남북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바로 그러한 영향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은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남한 내부의 민주화의 영향과 국제적 탈냉전의 여파 속에서 김대중정부는 햇볕정책을 통해 금강산관광 등 남북간의 실질적인 경제 교류협력의 길을 개척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김대중정부는 이에 바탕하여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 6·15공동성명의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이상이 국제적 탈냉전이 한반도 주변정세 및 남북관계의 변화에 미친 영향이라 한다면, 탈냉전의 상황 속에서 경제적 강대국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등장은 동

북아지역에서의 한국의 대외정책의 방향과 관련해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냉전기간 동안 주로 미·일 등과의 관계 속에서 그 발전을 도모해왔던 한국은 이제 중국 및 러시아 등과 더불어 동북아지역의 평화 구축과 공동 번영을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 동안 해양 통로만을 통해 그 발전을 도모해왔던 한국은 이제 기존의 해양 통로와 새로운 대륙 통로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탈냉전으로 인한 한반도 주변정세 및 남북관계의 변화, 그리고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지역이 갖는 의미의 변화는 이제 한국의 민족문제가 과거와는 다른 의미를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과거의 민족문제가 냉전과 분단의 현실 속에서 별다른 실제적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면, 이제 그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남북의 통일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민족문제는 북한을 고립시키고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만드는 한편 남북간 평화구축과 공동 번영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에서 그 해결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한국의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민족문제는 이제 그 해결이 미·일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중·러와의 관계 속에서도 보다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그리고 보다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